

“ILO 핵심협약 대통령 비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 전개 ... 박근혜 몰아낸 광화문 광장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포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 대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문재인 3법’이라 부르는 ▲상여금 강탈법-최저임금법 개악 ▲공짜 야근법-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식물노조법 폐기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죽어가는 노동공약을 상징하는 영정 팻말을 앞세우고 대학로에서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불법 파견 15년, 정몽구-정기선을 구속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자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연대사에서 “ILO는 1988년

총회에서 ‘노동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의결하고,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롯한 여덟 개 핵심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이에 따라 1992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87호와 98호 핵심협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욱 변호사는 “ILO 핵심협약은 이미 70년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며, 기본 인권을 천명한 핵심협약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아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비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 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라고 선포했다.

“ILO 핵심협약, 전 세계 노·사·정 합의 최소 노동기본권”

민주노총·공동행동, 문재인 대통령 비준 촉구 집중 실천... “100주년 총회 가기 전 비준하라”

오는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는 ILO(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총회를 한 달 앞두고, 민주노총과 ILO 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집중 실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총회에 가려면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5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긴급공동행동 집중 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는 전 세계 노·사·정이 합의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노·사·정 합의와 국회 동의가 먼저라며 핑계 대지 말고 핵심협약을 즉시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5월 13일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각계 1만인 선언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SNS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공동행동은 6월 1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정몽준 특혜 현충 분할 저지 나서

노조-대우조선 매각대책위 기자회견 ... “모든 전술 동원해 현충 임시 주총 막는다”

금속노조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5월 10일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여는 임시주주총회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이 통과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연구개발과 기술특허를 포함한 이익과 자산을 가져가고, 현대중공업은 부채 대부분을 떠안게 된다. 노조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꺾데기만 남기고 적자를 몰아줘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려 하는 계획이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안건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지주회사로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거느리게 된다. 정몽준 일가가 주식을 보유할 한국조선해양은 알짜 자산을 가져가고,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지배하는 셈이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노동자가 피땀으로 현장을 일궈냈더니, 현대중공업을 빈껍데기 하청회사로 전락시키는 계획을 내놨다. 80% 넘는 조합원이 반대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분할과 대우조선 합병은 정몽준 재벌의 지배력만 강화하고, 노동자는 구조조정의 위험으로 내모는 계획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승민 수석은 “노조는 국회토론회, 기업결합심사 의견제출, 주총 저지 1박 2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조선산업을 살리고,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부정을 덮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을 현대중공업에 서둘러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장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부실경영하고 관료의 놀이터로 만든 과거 잘못을 묻으려는 조치로 대우조선을 서둘러 매각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경률 변호사는 “대우조선이 보유한 드릴십이 팔리면 2조 7천억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 공격자금으로 유지한 회사의 이익을 현대중공업이 거머먹는 셈이다. 대우조선 매각중단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저지를 위해 행동에 돌입한다. 노조는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와 함께 5월 1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5월 22일 서울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날인 5월 30일 민주노총과 함께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영남권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1박 2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안정, 민주노조 운동성 회복 집중하는 요구이다”

현대자동차지부 2019년 교섭 요구안 확정 ... “추석 전 타결 목표, 노조 사회 고립 극복 앞장설 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허부영)가 5월 8일, 9일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13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2019년 단체교섭 핵심요구는 ▲통상임금 해결 ▲장년연장 ▲불법 파견과 불법 축적직 해결 ▲고용안정 등이다.

허부영 현대자동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단체교섭 핵심요구에 대해 “돈보다 고용안정, 실리보다 민주노조의 운동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요구이다”라고 밝혔다. 허부영 지부장은 “조합원·민주노조 운동의 미래를 위해 임금 격차 해소와 불법파견·불법 축적직 해결 등 대의명분이 있는 투쟁으로 지부가 노동조합의

사회 고립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노조의 공동필수요구인인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참여와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 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 체결 추진 관련 별도요구안도 확정했다.